“수서행 KTX 맞나요?”…‘SRT’ 문구 사라진 기차역

고속열차 통합 첫날 광주송정역 가보니

역사 안 곳곳에 안내문·입간판 비치

운임 인하·예약 일원화 시민들 반색

일각선 “오히려 대기 시간 늘어 불편”

“현장 승객 불만사항 파악 개선 노력”

KTX와 SRT 통합 운영 첫날인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에 통합 운영에 따른 정기승차권 이용 안내문이 마련돼 있다.(왼쪽) 같은날 플랫폼과 대합실을 잇는 통로 곳곳에서 ‘보라색 KTX도 용산갑니다’, ‘파란색 KTX도 수서갑니다’는 배너형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서형우 기자

“보라색 KTX도 용산까지, 파란색 KTX도 수서까지 갑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기관통합이 완료되고 두 고속열차가 ‘KTX’로 통합 운행을 시작한 첫날인 1일 오전 10시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송정역.

역사 안 각 표지판과 플랫폼 등에 표기됐던 ‘SRT’ 문구는 모두 자취를 감췄다. 그 대신 대합실에서 플랫폼까지의 이동 경로 곳곳에 ‘보라색 KTX도 용산 갑니다’, ‘파란색 KTX도 수서 갑니다’는 배너형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승차권 변경·반환 창구 주변에는 통합 운영에 따른 정기승차권 이용 안내문도 마련됐다. 통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승객 일부가 관련 내용을 유심히 읽어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안내문을 확인한 이들 중 일부는 역무실에 방문해 통합 이후 달라진 점과 업데이트된 ‘코레일+’ 애플리케이션 사용 방법 등을 문의했다.

특히 고령 승객들 사이에서는 “분명 SRT를 구매했는데 ‘수서행 KTX’라고 나온다. 정상적으로 예매된 것이 맞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통합에 따라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 전환되나, SRT 회원은 통합 애플리케이션인 ‘코레일+’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회원 예매의 경우는 여전히 SRT 애플리케이션으로 KTX 열차를 예매할 수 있어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는 것이 코레일 측 설명이다.

통합 첫날 혼선은 있었지만 승객들은 운임 인하와 예매 창구 일원화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 용산-광주송정 구간 운임료는 4만6천800원에서 4만2천원으로 줄었다. SRT 운임 기준에 맞춰 평균 10% 저렴한 수준으로 낮아진 것.

이에 더해 기존에 KTX를 이용할 때 적립되던 마일리지 혜택 또한 수서역 출발·도착 고속열차까지 적용되는 등 확대됐다. 공급 좌석도 일주일 기준 11만6천석 늘었고 1일 운행 횟수 역시 지난해보다 주중 23회, 주말 26회 증편됐다.

광산구 주민 양주영(40대·여)씨는 “예전에는 코레일·SRT 두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젠 한 번에 볼 수 있어 편하다”며 “처음이라 생소하지만 적응되면 더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수서행 열차를 예매한 김주희(50대·여)씨 역시 “운임료가 평소보다 저렴해 행사라도 하나 싶었는데 통합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웃어 보였다.

반면 일부 승객들 사이에서는 “통합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반응도 감지됐다. 전체 운행 횟수와 좌석은 늘었지만 시간표 조정 과정에서 일부 출퇴근·주요 시간대 열차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배차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대학생 김모(20대)씨는 “서울 갈 때 자주 타던 오전 11시12분 수서행 열차가 사라져 오히려 대기시간이 늘었다”며 “추석에 또 올라가야 하는데 증편에 따른 명절 예매 전쟁도 좀 나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통합된 코레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대한 불편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서구 주민 이모(32)씨는 “기존에는 열차별 요금과 매진 여부를 한번에 볼 수 있었는데 개편 이후 몇 단계를 더 거쳐야 해 번거롭다”며 “이용이 더 편리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직관성이 떨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코레일은 통합 초기 시간표 조정에 따른 불편은 향후 고속철도 선로 용량 확충과 함께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재천 광주송정역장은 “2028년 상반기에 오송-평택간 고속선 복선화가 완료되면 호남·전라선 열차도 증편돼 통합 초기 시간대 조정에 따른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라며 “통합 이후 승객들의 열차 이용이 더 편리해지도록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불편사항을 잘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형우 기자

중고차 무역 위장…테러단체 지원 우즈벡인 4명 검거

KTJ로부터 가상자산 3천여만원 수수

1억7천만원 상당 중고차 시리아 송출

인터폴 적색 수배자 구속…3명 불구속

“관련 세력 조직화 여부 등 공조 수사”

국내에서 중고차 무역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유엔(UN) 지정 테러단체에 가상자산과 중고차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피의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1명은 테러단체 지원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9)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유학생 비자로 입국해 대전의 한 대학교를 졸업한 뒤 2023년 1월부터 불법체류 상태로 대전에 머물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테러단체 ‘카티밧 타우히드 왈 지하드여단(KTJ)’에 가상자산 4267USDT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검거일 시가 기준 630여만원 상당이다.

또한 A씨는 KTJ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1억7천만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11대와 굴착기 2대를 구매한 뒤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 KTJ가 활동하는 시리아로 보낸 혐의도 받는다. KTJ로부터 A씨 측에 흘러간 가상자산은 3천여만원 규모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B·C씨는 A씨와 같은 대학 출신이며, D씨는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A씨와 함께 중고차와 굴착기를 시리아로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자국 수사기관으로부터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돼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도 올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월13일 대전 등지에서 A씨 등 4명을 검거했으며, 같은 달 21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국내 체류 외국인이 국제 테러단체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중고차 등 실물 자산을 구입한 뒤 다시 테러단체에 제공한 첫 적발 사례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KTJ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을 개인 가상자산 지갑 3개로 번갈아 사용하고, 중고차 구매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입금받는 등 자금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대포차를 운행하며 체포 당시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검거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준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테러자금금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해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된 또 다른 인터폴 적색수배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극단주의 이슬람 추종 세력의 조직화 여부를 살피는 한편, 가상자산 세탁 등에 관여한 조력자가 있는지도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보조금 9억여원 횡령 비리 유치원 폐쇄해야”

교육단체, 학습권 보장 전원 대책 촉구

교육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설립자가 9억여원을 횡령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폐쇄와 재원 중인 유아 100여명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전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 소재 H유치원 설립자가 2023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교사 급여 명목 국고보조금 8억400만원과 학부모 납부원비 1억3천300만원 등 총 9억3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유치원 회계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며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K-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장부를 조작해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교육당국이 감사를 통해 뒤늦게 인지한 만큼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횡령 규모를 고려할 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이 내려지면 H유치원의 교육환경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은 “설립자 구속으로 인한 정상적인 유치원 운영마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재원 중인 100여명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근 공립(병설) 유치원 학급 증설 등 전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H유치원 폐쇄 명령·전원 대책 수립 ▲설립자 비위·후속 조치 학부모 안내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특별감사 실시 및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유치원에 대한 유아학비 등 보조금을 정상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전원이 필요한 경우 인근 유치원 현황 및 전원 관련 사항을 학부모에게 적극 안내하는 한편, 증설이 필요한 경우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교육청은 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폐쇄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유아와 학부모,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정 기자